



폭염에 끓고 있는 광주 도심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1일 오후 광주 서구 도로가 끓고 있는 듯하다.

이용섭 광주시장, 클럽 불법건축물 형식적 점검시 반드시 책임 물을 것”

강도 높은 단속 주문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클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이 1일 “불법건축물에 대해 형식적인 점검을 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강도 높은 단속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8월 정례조회에서 “시장이 불법건축물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는데 일선 현장에서 집행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지난 주말 치평동 클럽 붕괴사고와 관련해 앞으로는 이런 불법 증·개축으로 무고한 시민들의 인명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불법건축물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유사 클럽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대집행과 관계자 고

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고 후 광주시와 5개 자치단체는 경찰, 소방당국과 함께 불법건축물 특별대책단을 구성해 감성주점(클럽)과 유사한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단속 첫 날인 지난 달 30일 35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해 19개 업소에서 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하지만 특별대책단이 업소의 영업시간을 몰라 헛걸음을 하거나 업주가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별대책단은 오는 9일까지 붕괴사고가 난 클럽과 유사한 유흥주점·감성주점 81곳을 대상으로 1차 점검을 하고, 11월까지 클럽 유사업소 1400곳을 대상으로 2·3차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서은홍 기자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100만명 달성 ‘청신호’

제주항공, 중국 엔지·장가계 등 2개 국제노선 21일 취항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에서 2개 국제선 정기노선이 오는 21일부터 신규 취항하면서 올 이용객 100만명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1일 밝혔다.

신규 취항 정기노선은 중국 엔지와 장가계로 제주항공에서 주 2회 운영할 예정이다.

한·일 무역 갈등으로 중단된 일본 노선을 중국 인기 관광지인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도는 운항 노선 다변화와 함께 광주 민간공항과 통합을 대비한 활주로 연장사업(2800→3200m)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또 미주와 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 대형여객기까지 투입되면 노선 다변화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상훈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최근 반일운동 확산에 따라 일본 노선이 중단되고 있으나 중국, 동남아 등 신규 노선 다변화를 통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국제공항은 올 들어 6월 말 현재까지 47만명이 이용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5%가 늘었다. 국제선 이용객은 167% 증가한 36만명을 기록 중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본사 하계휴가로 다음 호 12일자 발행합니다

“日 경제침략, 도민과 함께 이겨낼 것”

김영록 전남지사, 일본 아베 정부 강제징용 배상문제 ‘말 바꾸기’

“일방적이고 보복적인 경제 도발 감행...진정한 극일 이룰 것” 다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일 일본이 대한(對韓)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말 바꾸기’에 따른 ‘경제침략’으로 규정하고 “도민과 함께 이를 이겨내고 진정한 국일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 배상판결에 불만을 품은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한국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검토 중이고, 화이트(수출심사 우대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며 이같이 밝

혔다. 김 지사는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문제 끝났다고 우기지만 그야말로 자기감정, 억지에 불과하다”며 “1991년 8월 야나기 슈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이 공식석상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고 했고, 고노 다로 현 외무상도 지난해 11월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슈지 조약국장의 발언을 인정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일본 최고재판소 역시 2007년 중국인 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국가간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로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일본 정부는 갑자기 말을 바꿔 ‘국제법 위반’ 운운하면서 일방적이고 보복적인 경제 도발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지사는 “사정이 비슷한 독일의 경우 2000년부터 기업이 중상이 돼 ‘기억·책임·미래 기금’을 조성해 2차대전 당시 나치의 강제노동에 동원된 전세계 피해자 166만 명에게 5조 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 피해자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를 했다”며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가해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커녕 적반하장 격으로 우리에게 굴복을 강요,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국제적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며 “양국의 오랜 우호관계와 세계 경제질서를 깨뜨리는 경제보복 행위도 즉각 거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또 “지금 전국적으로, 또 각 분야로 돌봄처럼 번지고 있는 ‘노재팬(NO JAPAN)’ 운동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을 희생양 삼아 국제적 규범마저 저버린 아베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표현”이라며 “일본의 경제침략을 이겨내고 진정한 국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전남도민과 함께 할 것을 거듭 다짐한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자연속 구례
구례군 산동면 수락폭포